

해 외 출 장 결 과 보 고

1. 출장건명 : OECD 농업위원회 산하 작업반회의 결과보고

- 2014 OECD 농정시장작업반(63차 APM) 및 농업무역합동작업반(71차 JWPAT) 회의

2. 참석자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글로벌협력연구부 조재성 부연구위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전우석 대리

3. 출장일정

일 시	장 소	내 용	비 고
5월 18일(일)	인천 → 파리	출발, 도착	1박 1일
19일(월)	OECD Conference Centre	회의참석	2박 2일
20일(화)	OECD Conference Centre	회의참석	3박 3일
21일(수)	OECD Conference Centre	회의참석	4박 4일
22일(목)~ 23일(금)	파리 → 인천	귀국	4박 6일

I. 회의명 : 제63차 농업정책시장작업반(APM)

II. 개최일시 및 장소 : 2014.05.19-21, OECD 본부 회의장

III. 주관기관 : OECD 농업위원회

IV. 참석자 : 농촌경제연구원 조재성 부연구위원,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 전우석

V. 핵심요지

- 2014 OECD 회원국 농정평가 보고서의 Part I과 요약(Executive Summary)의 내용을 회의내용에 따라 수정 후 문서공개 결정하였음. OECD 사무총장의 책임으로 Part II와 부속서(Annexes)의 문서공개가 결정되었고 각국 의견이 고려될 것임. 지난해 회의에 이어 GSSE 구성 및 계산법 변화에 따른 관련 용어의 정의 및 분류에 대한 논의가 있었음
- 2014-2023 OECD-FAO 농업전망 보고서가 각국 대표들이 제출한 의견에 따라 수정 후 사무총장의 책임으로 문서공개 결정됨. FAO와 협력하여 사무국이 5월 21일까지 접수된 모든 코멘트를 검토할 것이며 필요할 경우 수정 예정임
- 신흥국에서 영세농과 상업농의 이원성(dualism)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영세농이 경쟁시장 접근을 방해하는 요소와 이에 대한 정책효과를 다루기 위해 PSE 데이터, FAO 선행자료, 선정국가에 대한 사례조사가 이뤄질 예정임
- 항생제는 축산업에서 질병의 치료와 예방뿐만 아니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성장촉진제로써도 사용되고 있음. 그러나 지난 10년 동안 항생제에 내성을 가진 병원균이 등장하고 확산함에 따라 항생제의 오남용은 공중위생 분야의 주요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항생제 사용의 편익과 비용을 분석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
- 개도국 발전을 위해 OECD 회원국들이 정책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약속은 오랫동안 논의됐으며, 현재 개도국의 식량 안보를 주제로 APM과 DAC는 공동으로 PCD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방법론을 개발하고 있음. 개발 중인 방법론은 탄자니아(1차)와 부르키나파소(2차)에 시범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며, 2014년 9월 DAC 회의에서 방법론 개발을 지속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임
- 스위스 농정개혁 평가 보고서, 농업 이원화와 구조변화 전략, 식량안보의 무역측면, 인도네시아의 일시적 식량불안정, 식품감모와 낭비 감소의 시장 및 무역영향, 농업생산성 성장과 혁신의 향상-시범국 리뷰 등의 문서는 회원국들의 의견을 반영한 후 11월 문서공개를 계획중임. 식량안보의 무역측면 보고서는 이번에 공개를 시도했으나 주요국 간에 입장차가 명백히 나타나 11월에 다시 논의하기로 함

VI. 관찰 및 평가/건의

- 올해 M&E에서는 캐나다, 멕시코, EU, 미국, 일본 등이 2013년 농업정책을 개혁하여 이에 대한 특징을 간략히 서술하고 있으며 2013년 12월 WTO 9차 각료회의 결과도 소개되고 있으나 특이사항은 없음. 한국의 경우처럼 PSE가 전년도에 비해 높아진 경우가 있으나 이는 정책의 변화라기 보다는 국제가격은 낮아지고 국내가격은 높아진데 기인한 것임. 논란이 있었던 새로운 GSSE의 구성 및 계산법의 변화에 대한 주요내용과 그 영향의 정도를 보고서 앞부분에 자세히 기술하기로 제안됨
- OECD 전망 결과를 활용하고 면밀하게 검토하여 에너지 가격과 국제 농산물 가격 상승이 국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 주목해야 하며,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함
- 식량안보의 무역측면을 다루는 보고서에서는 문서공개와 관련하여 주요수출국(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등)은 문서공개를 지지한 반면 EU 소속 국가들(EU, 프랑스, 노르웨이, 독일)은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였음. 한국은 농산물 수입국의 입장에서 농업의 비교역적 기능 또는 다원적기능에 대한 고려를 해야한다는 입장을 피력함
- 항생제의 효율성 보존을 위해서는 항생제의 사용을 제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먼저 항생제의 효과를 명확히 분석하고 적절한 사용지침을 만드는 것이 중요함. 하지만 자료의 부족으로 항생제 사용의 중장기적인 비용과 편익을 분석하는 것은 매우 어려움. 향후 자료의 확보를 통해 관련 연구가 지속된다면 가축뿐만 아니라 인류 보건 측면에서 항생제 사용과 관련한 정책 이슈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함
- “개도국 발전을 위한 OECD 회원국의 정책 일관성(PCD: Policy Coherence for Development)” 이슈는 OECD의 개발원조위원회(DAC)에서 오랫동안 논의됐으며, 현재 PCD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방법론의 개발이 진행되고 있음. 하지만 방법론 개발의 진행이 더디고 어려움에 따라 APM과 DAC는 2014년 9월 DAC 회의에서 방법론 개발의 지속 여부를 논의할 예정임. 우리나라도 OECD 회원국으로서 PCD 의무가 있으며 앞으로 ODA 규모가 더 커질 것이므로 향후 해당 분야에 관심을 두고 사전에 정책 방향을 점검하는 등 대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VII. 상세내용

1. 2014 OECD M&E(Monitoring and Evaluation 2014 OECD countries)

- OECD는 매년 체계적으로 회원국의 농업정책을 점검·평가하고 있으며, 이번 APM 회의에서 논의되는 본 문서는 OECD회원국들의 정책변화를 PSE, GSSE, CSE등의 측정수단을 갖고 분석하고 있음

- 의제 a는 Executive Summary, 의제 b는 주요 농업정책 및 지지의 전개, 의제 c는 OECD국가별 정책변화, 의제 d는 지지 추정치에 관한 통계자료임

○ 각국은 Part I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함

- EU : GSSE, TSE 및 CSE에 대한 시계열 추이를 Part 1 또는 Part 2에 언급하면 좋겠다고 제안함. 또한 Box 1.3에서 GSSE 지출의 일부가 CSE로 바뀌었는데도 CSE의 정의는 바뀌지 않은 이유를 질문함.
- 프랑스 : GSSE 방법의 변화와 관련하여 GSSE 변화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현재 Annex에 수록되어 있는데 이를 Part I에서 언급해야 하며 2013년과 2014년에 걸쳐 GSSE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 변화 정도(magnitude)를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함.
- 영국 : 문단 19에 환경친화(greening) 제도로써 국가인증제(National Certification Scheme)를 추가해 줄 것을 제안하였고 일본은 새로운 분류가 TSE 정의 자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함
- 캐나다 : 문단 66 이하의 Figure 1.11 GSSE의 구성에서 카테고리 정의에 모호성이 존재하며 무슨 수치를 썼는지 불분명하다고 언급함.
- 독일 : 캐나다의 의견에 동의하면서 미국의 TSE중 줄어든 부분이 다른 곳으로 이동해야 한다고 발언
- 미국 : 문단 11의 2013년 육류 가격 상승의 원인 설명에 있어서 좀 더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언급함
- 호주 : 주요정책변화가 아닌 높은 가격이 PSE의 주요 변화 이유라는 것을 주목하였으며 비연계 지불도 왜곡적일 수 있다고 발언함
- 뉴질랜드 : 모든 국가를 하나의 그래프에 넣어서 비교하는 방안을 제안함

○ 각국은 Part II(각국별 정책)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발언함

<EU 챕터 관련>

- 프랑스 : 문단 68에서 지불예산이 환경적으로 위험상태에 있는 민감한 쪽으로 가게 된다고 기술할 것을 제안함. 폴란드는 문단 55에서 의무적인 5% 감축에 대한 표현을 재정규율(financial discipline) 보다 재정감축(financial reduction)으로 바꾸는 것을 제안함
- 영국 : 문단 73에서 서술된 영국의 농업산림개선제도(Farming and Forestry Improvement Scheme)는 긴급 조치 관련 제도가 아니며 문단 81에서 이행계획 발표는 영국(UK) 전체가 아닌 오직 잉글랜드(England)에만 해당한다고 발언

<일본 챕터 관련>

- 일본 : 문단 133에서 쌀소득지불제를 종결(terminate)할 것이라는 표현을 점차적으로 폐지(phase out)한다는 표현으로 바꿔줄 것을 요청함. Box 9.1에 쌀 생산 쿼타가 2019년 3월까지 점차적으로 폐지된다고 하였으나 이를 2018년 3월까지로 수정 요청함

<미국 챗터 관련>

- EU : 미국 박스요약의 세 번째 요점에서 사용한 자동적 농가지지(farm support on an automatic basis)라는 표현은 OECD의 통상적인 표현이 아니며 또한 고정직불제의 폐지를 긍정적인 것이라고 표현했으나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고 언급함
- 사무국은 각국의 의견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음
 - EU 의견과 관련 GSSE의 시계열을 넣는 것은 올해 계산하는 방식이 바뀌어 시기상조이며 Figure 1.1의 GSSE 구성에서 뉴질랜드의 순위를 수정하겠다고 답변
 - 일본 의견과 관련하여 TSE의 구성요소인 GSSE가 변화되었다고 TSE의 정의가 바뀌는 것은 아니며 캐나다와 독일이 제기한 Figure 1.11 GSSE의 구성의 농업 지식 및 혁신 시스템에서 새로운 분류 적용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함
 - 새로운 GSSE 분류체계로 인해 미국의 TSE가 너무 줄었다는 독일의 질문과 관련하여 미국 SNAP 프로그램 부분이 소매업자에게 가므로 시스템 밖으로 나가게 되며 새로운 GSSE 방법론에 따른 변화정도(magnitude)를 Part 1에 추가하겠다고 답변

2. 2014-2023 OECD-FAO 농업전망

- OECD와 FAO는 공동으로 향후 10년 동안의 세계 농업 부문에 대한 전망보고서를 매년 발간하고 있음. 이 보고서는 2014년부터 향후 10년(2014-2023)을 전망하였으며 농정 시장작업반에서는 문서공개를 위해 보고서가 제출되었음.
 - 특별주제로 인도의 향후 10년에 대한 식량안보 전망과 도전과제를 포함하고 있음
 - 문서공개 결정이 이뤄지면 FAO와 OECD 사무국은 6월말 공동기자회견을 열 예정임
- Part I 개관(overview)
 - 프랑스 : 이전 코멘트를 받아들여 거시경제학적 가설에 대해 잘 설명하였고 새로운 농업정책과 관련한 연관성을 명확하게 표현하였음
 - 일본 : 박스 1.6 관련하여 일본농업정책 개혁에 대한 설명이 M&E 9.1과 같이 고쳐져야 하며 문단 51에서 중국, 인도, 태국, 베트남의 다양한 품목에 대한 정부 비축정책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데 베트남 정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추가되면 좋은 정보가 될 것으로 생각함
 - BIAC : 문단 8에서 인도의 새로운 식량안보법이 세계 곡물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명을 추가하는 문장을 넣을 것을 제안함
 - 미국 : 박스 1.7 2014 미국 신농업법 소개의 첫 문단 세 번째줄에서 SNAP의 주요 조항을 개정했다고 나오는데 이를 몇몇 조항을 수정했다는 표현으로 고칠 것을 요청하였고 문단 6의 STAX 설명의 두 번째 줄에 면적기준(area based)이라는 말을 추가하기를 희망함

○ Part I 특별주제 : 인도

- 특별주제에서는 향후 10년간 인도 식량안보 전망 및 과제에 대해 발표되었음. 인도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인구밀도가 높으며 농업종사자수가 가장 많은 국가임
- 인도농업의 최신경향은 시장통합으로 몇몇 품목은 국내 뿐만 아니라 국외까지 그 시장이 확장되었고 현재 농업 GDP의 75%가 고가치(high value) 품목임. 과거 곡물이 75%를 차지하고 단지 25%만이 고가치 품목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큰 변화라고 할 수 있음. 인도 농민들은 시장신호에 반응하여 생산을 하고 있음
- 과거에는 농업에 있어 정부의 몫이 컸지만 지난 10년 동안 민간주도로 바뀌었음. 투자의 80%가 민간에서 투자되며 정부는 단지 20%만 차지하고 있음. 면화의 경우 세계 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가금류 산업도 성장하고 있음. 인도는 ICT 기반 개입이 강하며 식품가치사슬에 있어 부가가치 형성이 중요해지고 있음
- 인도는 채식주의자가 대다수지만 최근 식단이 다양하게 변화되어 높은 곡물 수요와 더불어 우유, 유제품, 두류, 과채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또한 단백질을 함유하는 생선의 수요가 증가하고 매우 낮은 수준이지만, 육류에 대한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보임

○ Part I 인도에 대한 특별주제와 관련하여 각국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

- 프랑스 : 인도와 세계경제의 미래에 있어서 농업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매우 적절한 시기에 연구가 수행되었다고 생각하며 보다 많은 결실을 위한 첫단계라고 평가함. 또한 최근 인도의 무역량이 급증하고 있으므로 무역량의 향후 전망에 대한 정보가 추가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고 이는 인도의 식량안보 문제와도 연계된다고 하였음. 이전 버전과 비교하여 식량안보에 대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최소지지가격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에 대해 놀랐다고 언급함
- 캐나다 : 인도의 관개, 생산성, 식품손실에 대한 추가적인 코멘트가 있으며 이를 문서형태로 제출하겠음
- 미국 : 인도 대표가 이번 회의에 참여하여 발표한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하며 향후 인도와의 협력이 이번 한번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발언함
- 뉴질랜드 : 인도에 대한 내용이 잘 쓰여졌고 인도정부와의 협력이 이뤄진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함. 낮은 수확률(low yield) 시나리오에서 세계시장 및 국내시장 영향에 대한 그래프 추가를 제안함. 또한 낮은 인도의 GDP 낮은 곡물 수출과 연계되는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발언함

○ part II 품목별 전망에서 각국은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함

- 아르헨티나 : 3장 바이오 연료에서 문단 11에 아르헨티나가 국내 바이오디젤 혼합 요구사항을 2014년 1월 10%로 늘렸고 아르헨티나 정부가 2015년까지 목표를 20%로 설정한다는 표현이 있으나 그러한 목표가 없다고 밝힘

- 스웨덴 : 4장 곡물의 그림 4.1에서 쌀의 2015-16년 가격 반등에 대한 설명이 부재하다는 의견을 냄
- 아르헨티나 : 5장 유지종자 및 유지종자 상품에서 문단 79와 97에 아르헨티나의 차별적 수출세 시스템으로 인해 유지종자와 채소유의 세계 점유율이 증가한다고 되어있으나 농업전망에서 해당국의 조치를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이 두 서술을 삭제할 것을 요청하였음. 그러나 사무국은 수출세 시스템이 세계점유율을 올라가게 하는 원인이기 때문에 이러한 설명을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답변함. 한편, EU는 문단 105에서 EU집행위원회가 2013년 6월 1일부로 가금류와 돼지로부터 나온 가공동물단백질(processed animal protein)을 물고기 양식에 허용했으므로 2014년에 이를 가금류 및 돼지 사육에 대해 다시 사용하게 할 수 있다는 표현은 지나친 표현이라고 지적함
- 독일 : 6장 설탕에서 설탕에 대한 실질가격인지 명목가격인지 표시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하였음. EU는 문단 128에서 EU의 설탕 쿼타 폐지의 영향이 개혁이 이행에 달려있다고 표현되어 있으나 개혁이행에 한계가 존재한다고 발언함. 또한 7장 육류에서 오랜기간 동안 쇠고기 소비가 늘어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설명이 없으며 미국의 육류소비가 늘어나는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이 부재하다고 언급함. 사무국은 미국의 육류소비가 전망 초기에는 줄어 들고 있지만, 점점 육류 가격이 내려가면서 상승하는 것이라고 설명함
- 스웨덴 : 8장 수산물에서 EU의 최근 개혁내용이 담겨있지 않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질문하였음

3. 농업의 이원성을 고려하면서 구조조정을 촉진시키는 전략

- 사무국은 본 보고서가 영세농과 상업농 이원성을 다룬 Scoping paper로서 영세농의 경쟁시장 접근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고 영세농을 정책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였음. PSE 데이터가 가능한 국가를 사례대상지로 삼았으며 메트릭스 개선을 위해 회원국들의 도움을 요청함.
- 각국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함
 - 폴란드 : 이 주제는 폴란드를 비롯한 동유럽 국가에 특히 중요하며 소농에 대한 정의문제가 존재한다고 발언함. 보고서에서는 경지면적으로 소농을 정의하고 있으나 다양한 기준을 고려할 수 있음. 이원성은 구조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야 하며 사회적 측면까지 고려되어야 함. 유럽국가에서 사례를 추가할 것을 제안함
 - 스웨덴 : 연구를 지지하며 여성 농업인에게도 접근성 제한이 존재한다고 발언함. 경제 및 정치적 측면, 정부 부패의 맥락에 대해서도 살펴봐야 한다고 언급
 - 호주 : 개도국 연구를 통한 제약조건을 식별한다는 목적에 동의하며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함. 선행연구 및 PSE 데이터베이스를 통한 사례조사를 지지함

- 터키 : 농업에 신규로 진입한 젊은 인력들이 직면하는 문제를 언급함
 - 프랑스 : 프랑스 등 서유럽 지역에서는 이원성 문제가 부각되지 않으며 모든 나라에 해당하는 문제가 아니므로 국가선정에 신중을 기해야 함. 모든 나라에 적용 가능한 소농의 정의는 찾기 어려움
 - 벨기에 : 유럽에도 소규모 농가가 존재하고 있으나 벨기에의 경우 그러한 정책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평가하기 어려움
 - 캐나다 : FAO와 같은 다른 국제기구와 협력할 계획의 여부를 질문함
 - 아르헨티나 : 아르헨티나에 있어서 소규모 농민들이 직면하는 제약중 하나는 농가가 자체적으로 곡물을 비축할 수 있는지 여부임. 자체 곡물비축을 못하면 가격이 가장 떨어지는 수확기 때 판매를 하도록 강요됨. 식품가치사슬은 농약, 종자 등 주요 투입재 공급자들이 많은 이익을 가져가는 구조임
 - EU : 물리적 크기에 따라서 소농여부를 정하면 한계가 있으며 규모가 작더라도 산출물에 있어서 전문화된 농가들이 존재함. 또한 예를 들어 이행이론과 같은 다른 발전 모형의 고려 필요성을 언급함
 - 미국 : 미국은 소규모 및 초보농민에 대한 지원정책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하였고 상업농과 생계농의 구분에 대해 언급함
 - 멕시코 : 이 연구와 관련하여 필요한 데이터를 모두 제공할 것이라고 발언
 - 일본 : 식품가치사슬의 측면에서 이 연구를 지지하며 민관협력도 중요한 문제라고 발언함. 이 주제와 관련하여 일본도 몇가지 정책을 도입한바 있으며 선진국에서도 국내 농업정책중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언급
- 사무국 : 정의문제를 정확히 다루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일반적인 흑백논리로 접근하지 않겠다고 발언함. 또한 PSE 데이터베이스 뿐만 아니라 FAO 등의 선행 자료를 연구에 활용하겠다고 하였음. 메트릭스는 최종안이 아니며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 밝힘. 또한 PWB 2013~2014에서 신흥 개도국에 포커스를 맞추기로 하였기에 유럽국가를 선정할 계획은 없으며 또한 EU 개별 국가데이터가 가용하지 않아 때문에 그러한 사례조사 진행은 어려움이 있다고 밝힘

4. 스위스 농정 개혁 평가(Evaluation of Policy Reforms in Switzerland)

- 보고서의 목표는 1990년 초부터 최근까지 스위스에서 이뤄진 농업정책 개혁을 평가하는데 있음
- 농정개혁의 경제적, 환경적 효과와 스위스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연구함
 - 정책평가모델인 PEM 모델을 스위스에 적용하고 모형에서 환경적인 측면까지 고려
 - 스위스의 농업지대를 평야(plain), 구릉지대(hill), 산악지대(mountain)의 세가지 지역으로 세분화 하여 연구를 진행함

- 11월에 문서공개를 계획하고 있음

○ 연구의 결과가 제시하는 정책권고는 다음과 같음

- 무역장벽을 완화해야 하며 가공식품수출보조는 폐지, 일반적인 직접지불의 전반적인 수준을 감축, 상호 대립되는 정책목표를 조정하는 이원시스템(two-tier system) 도입하고 지역적으로 차별성 있는 정책 메뉴를 제공함으로써 이를 이행. 지속가능한 자원 이용과 동물복지 목적 관련 규제의 역할을 강화하되 이에 대한 직접지불은 축소, 직불제와 연계된 새롭고 더 엄격한 상호준수 요구에 대한 기초 가이드라인을 마련

○ 각국은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함

- 스위스 : 현재 제목이 정책개혁으로 되어있으나 농업분야만 다루고 있으므로 농정개혁으로 바꾸는 것과 일부 수치의 변경을 요청함. 식품분야에서 EU 일부 국가와 비교했지만, 다른 국가 및 EU 전체와의 비교도 희망
- EU : 좋은 초안이라고 평가하였고 EU 의회가 스위스, 미국, 캐나다와의 농정비교를 희망하고 있음을 언급. 권고사항에 환경준수 부분을 추가하기를 희망함. 스위스에 가축농에 대한 데이터가 있으므로 이를 추가해야 하며 농업환경 목표를 어떻게 설정하고 개발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추가하면 좋을 것임. 또한 모델링에서 PEM이 환경분야를 어떻게 포함할 수 있는지 설명이 필요하며 식품분야의 경우 네덜란드 LEI의 도움을 얻었지만, 향후 이 영역에 대한 자체연구가 가능한지 질문함
- 프랑스 : 환경 관련 정책, 동물복지 및 모델링에 관심이 많으며 식품분야 비교와 환경측면 고려 등 이번 보고서의 방법론이 향후 다른 나라에 대한 연구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 질문하였음
- 노르웨이 : PEM에서 환경부분을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 기술적 설명을 요청함. 또한 농약의 양을 계산하는 방식, 사용단위, 농약의 변화를 모형에 어떻게 반영했는지에 대해 질문함
- 아르헨티나 : 스위스의 농식품이 경쟁력있고 수출산업이라면 스위스가 수출보조를 없애도 괜찮은지에 대해 질문하였음

○ 사무국은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음

- 스위스의 요청과 관련하여 제목에서 농업이라는 단어가 빠진 것을 수정하겠다고 하였음. 다른 국가와의 비교는 데이터가 가용하지 않아 어려움.
- 아르헨티나 질문과 관련하여 스위스가 개혁을 통해 수출보조를 폐지했으며 가공품 분야에만 남아있다고 발언했으며 DDA 결과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발언함
- PEM의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답변에서는 기술 부속서(Annex)를 추가하여 보다 투명하게 방법론을 기술하겠다고 답변함. 지역마다 지불이 차별화 되어 있으며 PSE는 총합계이기 때문에 분해를 하였고. 환경측면 평가와 관련하여 생산 영향을 환경영향으로 변

환하는 작업을 거침. 동물수, 배출지수, 농약 등 화학물질을 고려함.

- 또한 외부효과를 다루기 위해 규제 또는 지불을 하며 환경적 의무를 추가하게 되면 상호준수의 표준을 올리며 농민들에게 더 많은 지불을 하게 된다고 언급하였음
- 향후 이 보고서에서 사용한 방식을 다른 보고서에도 사용하기를 희망하며 식품 관련 분석은 필요한 기술을 획득하여 OECD 내부 연구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답변. 그러나 현재 OECD에 식품쪽 전문가가 많지 않음
- 이 보고서는 가을에 개최될 농업환경공동작업반에서도 발표될 예정임

5. 정책일관성과 글로벌 식량안보

a) 식량안보의 무역측면

- 이 연구는 2013년 3월 APM 회의에서 설계제안서가 논의된 바 있고, 11월에 진도보고서가 논의되었으며 이번에는 공개여부를 결정하려는 것임
- 사무국은 현재까지 가용한 자료를 바탕으로 보고서가 작성되었으며 기본적인 결론은 무역정책을 통해 식량안보를 개선할 수 있으며 비무역 정책을 통해 무역정책으로 인해 나올 수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는 것이라고 발언함
- 각국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함
 - 미국 : 문서공개 지지를 표명하였고 분석과 결론에 동의한다고 하였음. 안전망은 중요하지만 다른 위험에는 다른 종류의 대처가 필요하다고 하였고 국제가격에 취약한 국가들을 위한 정치경제학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하였음. 또한 최근 논의되었던 WTO 발리 각료회의의 식량안보 문제가 다뤄지지 않은 것이 의문이라고 밝힘
 - EU : 문서공개 반대 의사를 밝힘. 지난 회기 때 사례조사를 하기로 했으나 이번에 추가되지 않았음. 사례조사가 추가되었다면 보다 명확해졌을 것임. 좋은 주제이지만, 새로운 내용이 없음. 식량안보(food security)와 자급(self sufficiency)의 개념은 다름.
 - 캐나다 : 균형잡힌 보고서라고 생각하며 문서공개를 지지함
 - 프랑스 : EU와 같은 입장이며 지난 보고서에 비해 진전이 무엇인지 알 수 없음. 선행연구가 더 필요하며 사례조사도 추가되어야 함. 미숙한 보고서이며 컨설턴트 연구를 통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밝혀줄 것을 요청함
 - 뉴질랜드, 호주 : 균형잡힌 보고서라고 평가하며 문서공개를 지지함
 - 한국 : 무역개방이 될 경우 비교우위가 높은 나라의 생산량은 늘어나지만 낮은 비교우위로 생산을 유지하고 있는 나라의 생산량은 줄어들게 되므로 세계의 전체 생산량이 늘어날 것인지 이에 따라 가용성은 더 커질 것인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함. 비교우위만

으로 농산물 무역확대가 필요하다는 설명은 농업이 갖는 비교역적 기능 혹은 다원적 기능을 고려하지 않는 일방적인 주장이며 서술이 균형적으로 추가되어야 함

- 노르웨이 : 문서공개를 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평가함
- 아르헨티나 : 식량안보의 해결책중 하나는 소득을 높이는 것인데 문제는 취약한 국가의 국민들이 충분한 소득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임. 무역정책을 통해 이 문제를 다룰 수 있으며 그 효과를 살펴보기 원함
- 독일 : 보고서가 너무 늦게 발표되었으며 11월 APM 때 처리하기를 희망함. 보고서가 무역측면에 좀 더 초점을 맞춰야 함

○ 사무국은 다음과 같이 답변함

- 사례조사 관련하여 FAO에 협조를 요청했으나 현재 FAO에서 관련 연구를 진행중이며 아직 자료가 가용하지 않다는 답변을 받음. 취약한 국가는 무역정책 외에 다른 정책을 수행할 여력이 없음. 11월까지 자료가 가용하지 않는다면 보고서를 마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임

b) 인도네시아의 일시적 식량 불안정

○ 본 건은 2013년 3월 APM 회의에서 설계서가 논의 되었고 2013년 11월에도 논의되었으며 많은 나라들이 관심을 표명한 바 있음

- 이 연구는 현재 일본과 네덜란드의 자금 지원 하에 인도네시아 정부와 협조하여 사례연구를 진행 중이며 호주와 일본의 학자가 같이 참여하여 분석에 협조하고 있음
- 토의를 통해 가장 중요한 위협요소가 될 수 있는 5가지 중요 시나리오가 식량안보 위협 요인으로 선정되었는데 1) 세계시장에서의 쌀 가격 폭등, 2) 거시경제적 위기, 3) 세계 연료가격의 폭등, 4) 쌀에 대한 식물병해충 발생, 5)수마트라섬에서의 지진임
- 현존하는 3가지 정책 대안이 분석되었으며 1)쌀 가격지지 제도, 2) 쌀 소비자 보조 프로그램 Raskin, 3) 조건없는 현금이전인 사회적 프로그램인 BLT 임
- Raskin과 BLT는 아무정책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모든 시나리오에 걸쳐 식량안보를 개선함. Raskin은 높은 행정비용이 들고 타겟팅 부족함. 쌀가격지지정책은 식량안보와 안정성을 증진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악화시킴

○ 각국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음

- 인도네시아 : 현재 인도네시아는 2015-2019에 대한 중기 계획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 보고서의 결과를 투입할 것이 기대됨. 시장가격보조는 논란이 되고 있으나 소농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논리가 들어가는 것임. Raskin은 시장가격 보조를 통합한 일종의 규약(protocol)으로 쌀을 판매하는 제도를 통해 가격을 관리하는 정책임.

- 일본 :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시나리오들을 잘 다루고 있음. 보고서에 인도네시아 내의 다른 가구들의 잠재력도 같이 고려되어야 함. 또한 칼로리 섭취와 관련하여 시계열 분석과 정책비교를 제안함. 소득계층간 수요탄력성 차이의 비교도 의미있음
- 프랑스 : 매우 야심찬 프로젝트며 보고서에 대한 지지를 표명함. 또한 시나리오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를 고려할 수 있는지를(scenario mix)를 질문하였음. 또한 통계에 따르면 대두는 단백질 섭취에 있어서 아주 적은 부분만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이 인도네시아에 있어서는 중요한 요소인지를 질문함
- 영국 : 매우 강력한 접근법이라고 평가하였고 BLT 프로그램이 비판받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함
- EU : 위험(risk)에 대한 접근은 신중해야 하며 위험평가절차에 대한 핸드북 참고할 것을 추천함. 4월 농업환경공동작업반에서 보고된 홍수 및 가뭄에 대한 보고서를 언급함. 위험상황이 발생할 가능성(likelihood)에 대한 고려를 했는지 여부와 모델의 Robustness 강화를 위한 방안을 질문함
- 미국 : 매우 유용하고 좋은 보고서이며 분석이 건전하고 긍정적인 반응이 많았음. 다소 혼동이 있는 부분은 multiple calorie level benchmark 관련 가구조사와 1인당 영양부족 데이터를 활용했는데 두가지 일치하지 않는 데이터가 합쳐진 것임

○ 사무국은 다음과 같이 답변함

- 인도네시아가 중기 계획을 준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적시성이 있다는 발언에 감사를 표함. Raskin과 관련하여 쌀을 판매하는 제도를 통해 가격을 관리하는 정책이라는 연계성을 알고 있음
- 프랑스가 시나리오를 믹스하는 문제를 제기했지만, 시나리오를 늘리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으며 오히려 꼭 필요한 것을 위해 시나리오를 줄이는 과정이 중요함
- 몇가지 상황을 합쳐서 부속서(Annex)에 추가할 수 있다고 생각함
- 미국이 제기한 다른 성격의 데이터의 문제점이 있는지 검토하겠음
- 영국이 제기한 소득 프로그램인 BLT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는 이유는 빈곤완화가 1차적 목적이기 때문이며 영양부족 문제가 함께 고려되어야 함
- EU가 제기한 문제와 관련하여 시나리오의 일어날 가능성(likelihood)을 계산한 것이 아니라 전문가들이 정한 순위(Ranking) 기준이었음. 또한 기술적인 robustness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 설명할 것임
- 정책의 타겟팅 문제는 중요함. 약 50%의 가구들이 인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음. Raskin 제도는 쌀구입을 지원하는 것이며 누가 이를 받는지에 대해 지역정부에 따라서 다름. 타겟팅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중요함
- 일본이 제기한 다른 소득 계층간 탄력성 비교와 관련하여 2006-10에 대한 탄력성을 이미 고찰했으며 정보가 존재하고 있음

c) 개발을 위한 정책일관성 : 추후연구에 대한 로드맵(구두보고) - 토론

- 사무국은 현재까지 PCD가 국가수준의 식량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방법론 개발과 관련된 연구 진행사항을 구두 보고함. 주요 내용은 PCD의 영향을 측정하는 방법론과 현재 준비 중인 탄자니아(1차)와 부르키나파소(2차)에서의 시범사업에 관한 설명임. 특히, 실질적이며 확실하고 적용 가능한 방법론을 개발하는 것에 대해 중점적으로 설명함. 사무국은 본 연구가 APM과 DAC의 공조를 통해 진행되고 있음을 설명하고 2014년 9월에 있을 DAC 회의에서 방법론 개발을 지속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임을 표명함.
- 회원국은 본 연구에 대한 지지의사를 표명함.
 - EU: 토론과 수정의 반복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본 연구에 대한 사무국의 노력에 감사하며, 본 연구를 통해 PCD의 영향에 대한 좋은 예시가 제공되었으면 함. 연구의 진행이 원활히 이루어져서 향후 탄자니아 시범사업이 성공하도록 사무국에서 노력해주길 촉구함. 사무국에서 제안한 방법론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사무국에 제출할 예정임.
 - 호주, 뉴질랜드: 연구를 지지하며 사무국이 본 연구의 질적 향상과 현실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주길 기대함.
- 사무국: 회원국들의 지지에 감사하며 탄자니아에서 연구에 참여하고 있는 현지 전문가도 이번 시범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정부와 민간도 다방면에서 연구에 도움을 주고 있음. 탄자니아에서의 방법론 적용에 대한 시범사업은 성공할 것으로 생각함

6. 항생제 내성 : 축산업에서 항생제 사용의 경제적 가치 추정 - 토론

- 사무국은 CDDEP(Center for Disease Dynamics, Economics and Policy)와 함께 축산분야에서의 항생제 사용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2014년 11월에 보고서 초안을 제출할 예정임. 사무국은 본 연구를 통해 1) 축산분야에서 항생제의 개략적인 사용규모를 추정하고 2) 항생제 사용의 비용과 편익을 추정·분석함으로써 항생제의 경제적 가치를 측정하려고 함.
- 회원국은 본 연구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공감하였으나 연구의 범위 및 방법론에 대해서는 많은 이의와 의견을 표명함. 특히, 미국 대표단은 본 연구가 가지고 있는 잠재적 오류에 대해 가장 많은 의견을 제시함.
 - 스웨덴: 본 연구는 스웨덴의 주요 관심사항이며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음.

본 문서와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들에 대한 추가적인 고려나 답변이 필요하다고 판단함. 1) (항생제 사용규모와 관련하여) 집약농업에서 항생제 사용이 반드시 많은 것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지역별·축산 집중도별 자료의 수집과 항생제 사용량 간의 관계정립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함. 2) (항생제의 비용편익과 관련하여) 본 연구를 통해 항생제 사용의 단기적·장기적 경제적 편익이 실질적으로 밝혀지길 바라며, 부족한 자료를 바탕으로 어떻게 인간 건강과 항생제 내성의 관계를 밝힐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미국: 미국은 이번 APM 의제 중 본 연구에 가장 많은 의견을 가지고 있음. 먼저, 본 연구의 두 가지 목적과 방법론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불명확하며 불확실해 보임. 세부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음. 1) 자료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에서 문헌조사를 바탕으로 연구 진행한다는 것이 부적절해 보임. 2) 연구 개념 및 범위에도 많은 문제가 있음. 세상에는 많은 종류의 항생제가 있는데 본 연구에서 모든 항생제의 사용량을 측정한다는 것인지 궁금함. 만약 그렇다면 연구가 현실적인지 재고할 필요가 있음. 항생제 사용과 지역별 가축밀도와의 관계 및 인간 건강과의 관계를 밝히려는 연구의 범위 자체가 너무 넓고 비현실적이라고 판단함. 3) 인간의 건강과 항생제의 관계를 밝히면서 자료의 부족을 민감도 분석으로 보완하려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인간의 생명과 연관된 문제를 민감도 분석으로 다루겠다는 것 자체가 문제를 내포하며, 인간 건강과 항생제 사용에 대한 문헌 자료도 거의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상호관계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항생제의 경제적 가치를 도출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음. 4) 항생제 사용을 줄였을 때의 편익 등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계열 자료의 수집이 필요한데 자료 없이 어떻게 분석을 시도할 것인지 궁금함. 5) 가축 사육 시 질병 예방을 위한 목적과 성장 촉진 목적으로 항생제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두 가지 측면을 어떻게 정확히 분류해 낼 것인지 궁금함. 예를 들어, 항생제가 포함된 사료가 정확히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구분하기 어려우며 그 효과 또한 분리해내기 어려움. 결과적으로 본 연구는 현실성이나 연구 방법의 합리성 측면에서 많은 문제를 내포하며, 지역별 가축사육밀도와 항생제 사용량의 관계 도출 시 현재 제기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한) 방법론의 경우 미국에 불합리한 결과를 도출할 우려도 있음.
- 캐나다: 방법론이 명확하지 않으며 잠재적인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함. 현재로서는 기초자료로 사용하기에도 부족한 연구임. 연구의 범위를 2~3가지 축종과 특정 생산시스템으로 한정하는 등 연구의 범위와 방법을 한정하고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또한, 미래 항생제 사용 추세를 알아보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궁금함.
- EU: 본 연구의 중요성은 앞으로도 지속해서 증가할 것이며, OECD는 본 연구를 수행하기 가장 적합한 주체라고 생각함. WTO에서 2014년 4월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항생제 내성이 인류 건강을 위협하는 중요한 문제임. 따라서 정책 결정자들은 의약품 통제에 힘쓰고 있지만, 기업들을 통제하는 것은 매우 어려움. EU는 본 연구가 향후 좋

은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라고 생각함. 추후 연구의 진행 과정에서 유럽 수의약품심의 위원회와 민간의 도움을 얻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판단함. EU의 경우 항생제 사용과 관련한 공식적인 자료들을 보유하고 있으며 제공할 용의도 있음. 다만 본 연구의 내용과 방법이 너무 광범위한 것은 문제라고 판단하며 본 연구에 대한 미국의 지적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연구 범위와 방법을 세분화시키고 한정할 필요가 있음. 마지막으로 항생제 사용이 축산농가의 생산성 기여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가 매우 적다고 밝혔는데 그렇다면 왜 많은 축산농가가 항생제를 사용하는지 의문임.

-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본 연구에 대한 관심과 지지를 표명하며 자국의 연구 등 관련 자료를 제공할 용의가 있음. 그러나 연구 범위와 방법론을 포함한 세부연구내용이 명확하지 않음. 따라서 연구 범위와 방법에 대한 정리와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함.

- 사무국: 연구의 실질적인 수행기관인 CODEP에서 답변을 주도함. 우선 본 연구가 선도적인 연구라는 점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음. 회원국들이 언급했듯이 본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는 매우 부족하고 항생제 내성과 인간 건강과의 연관성을 밝히기 위해서는 향후 많은 연구가 필요함. 다만, 항생제 사용은 인간과 동물의 건강뿐만 아니라 환경과도 밀접하게 연관되는 매우 중요한 주제임. 따라서 사무국과 CODEP는 본 연구를 통해 일차적으로 항생제 사용량을 추정하려고 함. 자료나 방법론적인 한계로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면 항생제 사용량에 대한 추정은 앞으로도 불가능함. 지리적 가축사육밀도 등을 알아보는 것은 항생제 수요대상에 대한 정보획득이 주목적이며, 미래 항생제 사용 추세도 지리적 가축사육밀도 증감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생각함. 특히, 브라질, 인도, 중국 등에서 향후 가축사육두수 증가와 함께 많은 항생제를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함. 따라서 지리적 가축사육밀도 등의 정보는 항생제 사용량을 추정하는 데 중요한 요인이라고 판단함. 연구 범위와 방법론, 기초자료와 관련해서는 관련 분야 과학자들과 각국 대표단들과의 협의를 통해 보완해나갈 예정임. 향후 일정은 회원국들이 오늘 제시한 의견과 written comments를 바탕으로 연구제안서를 수정할 것이며, 11월 APM 회의에서는 수정된 연구제안서(10월 제출예정)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임

7. 미국 바이오 연료 의무사용량 : 2014년 미국 환경보호국 의사결정의 영향 - 토론

- 미국 환경 보호국(EPA)에서 2014년 6월 발표할 미국 바이오 연료 정책은 향후 세계 바이오 연료 시장과 농산물 시장에 상당한 파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사무국은 2014년 미국 바이오 연료 의무사용량과 향후 바이오 연료 의무사용량을 결정하기 위해 제안된 방법이 세계 바이오 연료 시장과 농업에 미치는 중기적(10년, 2014~2023년) 영향을 평가하고자 함. 본 회의에서 사무국은 연구의 범위와 방법에 대해 설명함.

- 미국과 프랑스 대표단이 의견을 표명함. 프랑스는 연구를 지지하였으나, 미국 대표단은 지지의사와 함께 연구에 대한 우려를 표명함.
- 미국: 경제적 관점에서 연구를 지지하나 특정 국가의 특정 정책을 OECD 연구의 주제로 다루는 것은 부적절해 보임. 특히, 아직 정해지지 않은 정책 결정에 대해 가정을 세워 연구를 진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므로 향후 실제 정책이 발표된 이후 연구가 진행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함. 다만, OECD의 연구가 특정 국가에서 정치·경제적으로 민감한 주제를 다루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며, 본 연구의 진행 계획 및 방법과 결과에 대해 미국과의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지길 바람.
- 프랑스: 연구를 지지함. 본 연구는 지난 3월 회의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향후 국제 농업분야와 OECD-OUTLOOK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APM 회의에서 다루어지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함.
- 사무국: 사무국은 미국의 바이오 연료 정책이 국제 농산물 시장과 바이오 연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는 판단으로 본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음. 프랑스의 연구 지지에 감사하며 프랑스의 견해에 동의함. 사무국은 바이오 연료가 농업분야의 중요한 의제라는 점에서 연구를 계속 진행할 것이나, 연구 진행에 있어 미국과 충분한 의견 교환을 할 예정임.

8. 식품손실 및 쓰레기 감량이 시장 및 무역에 미치는 영향 - 토론

- 사무국은 2013년 개요보고서에서 Aglink-Cosimo 모형을 이용하여 식품 체인별 식품 쓰레기 감량이 시장 및 무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량분석 연구에 대한 계획을 설명하였음. 개요보고서에 대한 APM 논의결과에 따라 그동안 사무국은 분석시나리오를 설정 및 수정하였음. 대표적인 수정사항으로는 가정의 현실성을 높이고 OECD의 선행 연구를 참고하여 연구결과의 개별국가에 대한 적용성을 향상시킨 점임. 사무국은 경과보고서와 함께 일본과 영국의 사례분석결과도 함께 보고하였음. 2014년 11월에 제출할 보고서는 11월 APM 회의에서 공개를 목적으로 논의될 예정임.
- 회원국은 본 연구에 대한 지지의사를 표명하며 세부 연구내용에 대한 의견을 개진함.
 - 아르헨티나: 국가 간 수송 및 검역 과정 등에서도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을 연구에 고려할 필요가 있음.
 - EU: 녹색 경제, 지속 가능한 경제, 효율적 자원활용, 환경 등 다양한 분야와 연관있는 흥미로운 연구임. 하지만 시나리오의 현실성 제고를 위해 민감도 분석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 식품 손실이 이루어지는 과정과 손실량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함.
 - 프랑스: 연구를 적극적으로 지지함. 다만 식품 손실과 관련한 비용이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음. 방법론에서 Aglink-Cosimo 외에 CGE 모형의 활용 및 비교분석도 고려했으면 함. 보고서에 그래프와 다이어그램 등을 삽입해서 독자들의 이해도를 증진시킬 필

- 요가 있음. EU의 의견처럼 시나리오에 대한 시험(민감도 분석 등)이 필요함.
- 영국, 일본: 사례연구로 채택된 것과 연구결과에 만족하며, 이후에도 지속해서 본 연구를 지지하겠음.
 - 포르투갈: 연구결과를 보편적으로 다양한 국가에 적용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음. 향후 국가별 비교가 가능한 연구가 필요하며, 이번 연구가 시작이라고 생각함.
 - 미국: 미국에서도 비슷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사무국의 연구를 지지함. 참고로 2014년 2월 발간된 미국 ERS 보고서에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의 최신판이 제공되어 있음.
- 사무국: 식품 손실을 줄이는 데 필요한 비용에 관한 자료가 없어서 현재로서는 해당 비용이 없다고 가정했음. 많은 회원국의 우려처럼 Aglink-Cosimo 모형은 과일, 과채 등 일부 농업부문을 다루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음. 따라서 보고서 초안에는 Aglink-Cosimo 모형과 CGE 모형을 사용해서 식품 손실 및 쓰레기 감량이 시장 및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동일한 시나리오를 통해 살펴보고 두 모형에서 도출된 결과를 비교·분석하겠음

9. 식품가격 형성 - 토론

- 최근의 식량 위기는 식량 가격, 식량 가격 변동성 및 식량 안보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음. 2011년 6월 FAO, IFAD, IMF, OECD, UNCTAD, World Bank, WTO는 G20를 통해 식량 가격 변동성에 대한 공동 대응책을 발표하였고, 2011년 9월 OECD 식품체인분석 네트워크(FCAN)에서는 식품 사슬에서의 가격형성, 가격전이, 투명성을 논의함. 사무국은 2013년 11월 APM 회의에서 논의된 식품 가격 관련 내용을 정리하고 연구의 진행 상황을 보고함. 사무국은 대표단에게 식품 가격 모니터링 비용, 식품 가격 변동과 전이 등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
- 회원국은 연구를 지지하였으며,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음.
- 폴란드, 노르웨이, 네덜란드, 캐나다: 연구를 지지하며 식품 체인에서의 가격 전이 자료, 식품 가격 감시 체계와 규제 관련 자료 등 관련 분야 자료를 제공할 의사가 있음.
 - 아르헨티나: 데이터 구축 시 동일 상품이라도 국가별로 명칭이나 용량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따라서 자료 구축 시 국가별 자료의 비교 가능성을 고려해 주길 요청함.
 - EU: 본 연구는 자료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식품가격 주요요인, 가격 전이와 변동성 등 다양한 부분을 포함하기 때문에 좀 더 세심한 접근이 필요함. 식품 가격 감시 체계를 포함하여 다양한 분야의 연구 자료와 Eurostat 자료 등을 제공할 용의가 있음.
 - 프랑스: 적극적인 참여의사 개선. 식품 마진, 식품 가격 감시 체계 관련 자료를 제공

할 용의가 있음. 특정 품목의 경우 분기별 자료의 유용성이 낮으므로 해당 품목들은 월별 시계열 자료로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일본: 세계 식량 안보와 관련해서도 매우 중요한 연구라고 생각함. 가격자료 구축 시 자료 선택에 신중할 필요가 있음. 식품의 질과 가격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식품의 질적 차이에 의한 가격 차이도 연구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 호주: 식품의 정의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식품 가격이 소비자 가격인지 농가 판매 가격인지 명확한 구분이 필요함. 연구가 개도국 중심적인 측면이 있는데 OECD 국가와의 연관성을 강화하고 그룹별로 구분해서 연구할 필요가 있음. 호주의 식품 공급체인 등에 관한 연구 자료를 제공할 용의가 있음.
- 벨기에: 식품 가격과 위험관리 측면에서 중요한 연구라고 생각함. 개도국과 선진국 등 다른 경제 구조를 가지는 국가들을 구분할 필요가 있음. 최대한 많은 국가에 적용 가능하도록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음.
- 미국: USDA에서도 유사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음. 중요한 것은 연구결과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준비가 필요함.

- 사무국: 회원국의 지지에 감사함. 다만 연구범위는 넓지만 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수행되는 연구이기 때문에 회원국들의 관심 품목과 가격을 모두 다루기는 어려움. 따라서 중요 품목을 정하고 국제가격에 대해 최근 연구들을 정리하는 수준에서 연구는 진행될 것이며, 내년 OUTLOOK에서도 다룰 예정임. 회원국들의 자료 협조 등 적극적인 참여에 감사함. 이번 연구에서는 현재 식품 가격 형성 및 전이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정리하고 다음 단계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았으면 함. EU는 이미 본 연구와 유사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으므로 EU에 중점을 둔 연구는 회의적임. 추가로 궁금하거나 관심사항이 있으면 개별적 연락요망. 2014년 6월 4일까지 Written Comment를 받음

10. 재해위험관리를 위한 정책적 접근 : 가축질병 - 토론

- 2013년 11월 APM회의 이후 관계국들로부터 받은 의견과 자료를 기초로 세 가지 계층에 대한 정보를 수정하였음. 주요한 변화요인으로는 수의 시스템에 대한 상황정보, SPS(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와 연관된 무역에서의 간접손실에 대한 새로운 변수를 추가하고 처리방법에 대한 변수를 제외한 것임. 처리 방법은 질병 근절과 지역적 방역의 일부임으로 처리 방법에 관한 변수는 질병 근절과 지역적 방역의 일부로 포함시킴. 또한, 질병 발생의 사회경제적 영향을 정리하기 위해 개발된 지표를 기초로 3계층에 변화를 주었음. 사무국은 회원국들에게 자료 구축을 위해 발송한 질문지에 대한 회신을 요청하였으며, 본 연구의 초안은 2014년 11월 APM 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임.

○ 회원국은 본 연구에 대한 지지의사를 표명함.

- EU: 사무국의 노력에 감사함. 연구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으며 연구체계도 잘 구축되었다고 생각함. 두 가지 측면에서 의견을 개진함. 1) 질병 통제를 위한 적절한 국내 정책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이를 위해 OIE와의 긴밀한 협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또한, 무역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의 간접효과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2) 자료의 공유를 통한 상호 이해 증진이 필요하며 질병이 없을 때에 쓰이는 비용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음. 추가로 정책의 국가 간 비교를 위해서는 비슷한 유형의 국가들을 분류하여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음.
- 캐나다: 중요한 연구라는 점에 동의함. 다만 방법론에서 국가 간 차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캐나다는 공식적으로 본 연구에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고서에 명시된 캐나다 관련 내용은 모두 삭제해주길 요청함.
- 일본: 일본에서 BSE는 현재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일본의 BSE에 관련 내용은 연구에서 제외해주길 요청함.
- 미국: 가축 질병 감시에 필요한 비용 측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며 국가 간 정책비교가 가능하도록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음. 보고서의 일부 표에서 출처가 누락된 경우가 있음.
- 네덜란드: 가축 질병이 무역에 미치는 효과는 수출국 입장에서 매우 중요함. 따라서 추후 연구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길 기대함.
- 스웨덴, 프랑스: 본 연구를 지지하며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것임.

○ 사무국: 가축 질병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은 계층 3에서 다룰 예정이었으나 관련 자료의 부족으로 어려움. 연구를 진행에서 가장 큰 문제는 자료의 확보이며 특히, 가축 질병의 경제성과 관련한 자료는 거의 없음. 또한, 일부 국가(캐나다)는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으나 자료 제공을 거부하고 있음. 따라서 본 연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는 회원국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함.

○ 사무국: 본 연구에서 질병 예방을 위한 정책이나 비용 등을 모두 다루기는 어려우므로 질병이 발생한 상황에만 초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함. 사무국은 2014년 6월 말까지 현재 가용한 자료를 수집하고 질문지에 대한 답변서를 사무국에서 받을 예정임. 이번 회의와 관련한 Written Comment는 6월 4일까지 받을 예정임. 사무국은 2014년 11월까지 최대한 국가 간 비교가 가능하도록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며, 초안은 11월 APM 회의에서 발표할 예정임. 초안에는 질병 발생과 정책 수단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의 방법론적 체계와 정책분석에서 데이터베이스의 유용성에 대한 설명이 포함될 것임

11. 농업생산성 성장과 혁신의 향상

a) 국가별 파일럿 리뷰

- 사무국은 농업혁신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3개국(호주, 브라질, 캐나다)에 대한 파일럿 국가 사례검토가 준비되었으며 각국의 의견을 반영한 후 11월 문서공개 추진 예정임
- 혁신은 기본적으로 투자의 과정이며 장기적 측면에서 바라봐야 함. 정책이 경제적 안정성 제공과 경쟁을 위한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손쉽게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함

○ 호주보고서

<주요 발표내용 요약>

- 2000년대 이후로 농업생산성 성장에 저하가 있으며 최고 성과를 내는 농가와 평균 농가 사이의 간극이 커지고 있음. 지속가능발전 및 기후변화 조정 압력이 있으며 광산부로부터 유래한 높은 환율, 다른 분야 무역에 기인한 자원경쟁 등을 직면
- 좋은 거버넌스를 가지고 있으며 규제환경은 경쟁에 우호적이며 정기적으로 평가됨.
- 농업보다는 산업에 대한 보호가 크며 잘 작동하는 주식 및 은행시장을 가지고 있음. 그러나 많은 농가들이 혁신에 대한 제약으로 재무의 부채를 지적하고 있음
- 세제 개혁은 청사진이 개발되었으나 아직 미래가 불명확하며 농가에 대한 전반적 지지는 생산성 강화를 위한 서비스 쪽으로 재배치되어 있음
- 산업계 필요에 의해 공공부문과 산업계 공공기금 및 협력이 존재하고 있으며 국제적 협력은 매우 제한되어 있음. 연구, 인프라, 농촌지도에 대한 공공기금이 줄어들고 있다는 우려가 있음

<호주 보고서에 대한 각국 의견>

- 호주 : 유용한 정책권고에 감사하며 보고서가 경제 전반적인 측면에 치중되어 있어 농업부문에 좀더 집중할 필요가 있음. 이전 정부의 정책이 반영되어 있는 부분은 현 정부의 것으로 업데이트할 필요가 있음. 또한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직면하는 유사한 도전과제에 관련 대응을 서로 비교하여 합의도출을 희망함
- 네덜란드 : 혁신과 관련하여 네덜란드는 지속가능 성장 목표를 가지고 있으나 호주의 경우가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음. 농업부문중 어느 분야가 혁신을 이용하는지 정보추가 필요
- 포르투갈 : 농업현장에서 농민들이 어떻게 연구결과가 존재여부를 알 수 있고 이를 전파받는지와 품목별 혁신전파를 위해 어떻게 농민들을 조직하는지에 대해 질문함
- EU : 증명되지 않은 추측성 문구가 도입부에 존재하므로 보완 필요. 호주는 경쟁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경쟁은 필연적으로 협력을 어렵게 함. 상업적 단계 이전의 지식은 서로 공유하려고 하겠지만, 상업적 단계에 이른 지식의 공유는 쉽지 않음

- 에스토니아 : 향후 국가간 비교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OECD에 교육 중 농업 및 수의학 교육관련 통계가 존재하며 농업대학 여성졸업생에 대한 통계도 존재함(ISCED)

<호주 보고서 관련 답변>

- 호주 : 규제 분야에서 지속가능성 관련 내용을 다루고 있지만, 현재 보고서에는 강조되어있지 않음. 호주정부의 세금(levy) 매칭 펀드 제도를 통해 농민들이 연구 협력부분에 세금을 내면 정부는 이에 공공펀드를 매칭하여 연구개발협력 활동에 기여하며 이는 농민들이 농촌 R&D에 투자하게 되는 큰 인센티브가 됨.
- 사무국 : 전체적인 프레임웍에서 농업혁신 보다는 너무 일반적인 부문을 다룬 경향이 있었음. 호주보고서는 아직 예비적 단계이며 규제, 교육, 인프라 부분이 추가될 예정임

○ 브라질 보고서

<주요 발표내용 요약>

- 브라질은 1980~1990년대에 과학기술을 통해 많은 혜택을 입었으나 과거 개혁을 통한 성장동력이 소진됨. 신흥경제국의 경기가 저하되는 상황에서 농업성장 및 지속가능성, 빈곤감소와 같은 사회적 목표를 조화시키는 문제도 직면하고 있음. 브라질은 전반적으로 낮은 교육 및 기술 수준을 가지고 있으며 장기적 자금조달도 쉽지 않은 상황임
- 과거보다는 개선되었으나 새로운 비즈니스를 시작하기에 힘들고 사업비용이 다른 국가에 비해 높아 이에 대한 개혁이 필요함. 거버넌스와 제도의 품질이 OECD의 수준보다 뒤쳐지고 있음
- 장기 은행융자가 하나의 국가기관(national development bank)에 집중되어 있고 대출에 높은 비용이 들고 있음. GSSE가 낮고 인프라가 증가했으나 여전히 부족한 상황임
- 상당히 성공적인 농업지도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며 농업부문의 필요에 따라 기술적 혁신을 창출하고 있음. 리서치를 위한 민간 기여를 진흥할 필요가 있음

<브라질 보고서에 대한 각국 의견>

- EU : 농업분야 혁신이 주제인데 일반적인 산업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음. 개혁을 통한 성장동력이 소진되었다(exhausted)는 표현은 문제가 있음. 혁신을 위한 의사결정에 농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질문함
- 브라질 : 거시경제 분야에서 브라질은 매우 건전함. 건전한 인플레이션 목표와 좋은 자본 환경을 가지고 있음. 다만 어려운 부분은 인프라 및 교육수준의 부족이라고 생각함

<브라질 보고서 관련 답변>

- 사무국 : 이전 개혁으로 더 이상 발전할 수 있는 이점이 없으며 추가적인 개혁이 필요

하다는 의미로 ‘소진되었다’는 표현을 쓴 것임. 장기 신용의 부재라는 발언은 지금 자금이 하나의 국가은행으로부터 나오고 있으나 민간분야에 대한 개방 없이 장기적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음. 브라질은 소농보다 대농에 더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며 이제는 소농에 우선순위를 뒤야할 필요가 있음

○ 캐나다 보고서

<주요 발표내용 요약>

- 캐나다는 풍부한 자연자원, 원활히 작동되는 제도, 좋은 인프라 등 농업에 우호적인 환경을 가지고 있음. 또한 경제 및 제도적 안정성, 효과적 재산권과 사법시스템을 갖추고 있음.
- 규제가 간소화되고 최신화 되어 있으며, 과학적 증거에 기반하여 의사소통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낮은 관세를 통해 외국으로의 생산요소 접근을 원활하게 하며 농민들을 위한 은행 부문 농업신용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음
- 휴대폰이나 인터넷 같은 정보통신분야(ICT) 활용이 부족하며 OECD는 통신분야를 개방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 유연한 노동법이 있으나 노동공급과 수요가 불일치함. 아주 잘 작동되는 교육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나 정식교육과 실용적 경험을 제3의 교육(tertiary education)에서 통합하고 리서치와 교육제도 사이의 구별을 증가시키는 과제에 직면하고 있음
- 농업혁신시스템은 분절화되어 있으나 조정 메커니즘이 잘 되어 있음. R&D 공공투자는 줄어 들고 있으나 밀도는 여전히 높으며 민간투자는 증가되고 민관 파트너십이 촉진되고 있으나 여전히 문화적 차이가 존재함. 지적재산권이 분야가 강하지만 식물보호 분야는 부족한 모습을 보임. 세계적으로 농업 연구에 많이 공헌하고 국제적인 교류가 강함

<캐나다 보고서에 대한 각국 의견>

- 에스토니아 : 캐나다는 특히 축산분야에서 배울점이 많으나 보고서는 축산분야 혁신을 강조하고 있지 않아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질문함
- EU : 호주의 혁신이 산업계 주도라면 캐나다는 학계 주도라는 느낌이 듦. 주제는 혁신인데 내용이 연구쪽에 치중되어 있다는 생각이 듦. 또한 수요주도 연구와 관련하여 농민이 어떻게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질문함

<캐나다 보고서 관련 답변>

- 캐나다 : 축산분야는 공공보다는 민간에서 투자를 많이 하고 있음. 수요주도적인 연구는 각 부문별로 많이 이뤄져 왔으며 정부와 민간의 균형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사무국 : 혁신은 생산성 증대를 위한 중요한 요소이며 연구는 혁신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세가지 보고서 전체에 대한 논평

- 독일 : 공교롭게도 세 국가 모두 연방정부 형태이며 이와 관련한 문제는 없는가?
- 프랑스 : 이 국가들을 비교할 계획은 있는지와 향후 보고서 스케줄은 어떻게 되는가?
- 네덜란드 : 지속가능성 문제와 관련한 프레임워크에 대하여 질문함
- 포르투갈 : 세 국가에 대한 분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결론은 무엇인가?

<사무국 답변>

- 프레임워크를 계속적으로 개선시킬 예정이며 좀 더 많은 나라가 있어야 비교가 가능함. 혁신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해당 국가의 농정 뿐만 아니라 그 국가의 다른 정책도 포함함. 배울 수 있는 부분은 국가마다 다르며 공통적인 함의를 얻을 수는 있겠지만, 각 국가별 함의는 따로따로 얻어야 함

b) 민관 파트너십 : 식품체인 분석 네트워크 회의 아젠다

○ 애초에 6월 16-17로 예정되어 있던 회의가 10월 13-14일로 연기되었음

- 사무국 대표들이 여름에 많이 바쁘고 무엇보다 주 연사(main speaker)의 스케줄이 6월 중 가능하지 않았음. BIAC이 개최하는 행사도 함께 개최하기로 되어있었으나 부득이 행사개최를 연기하게 되었음

12. 수입 공조국 모임

- 스위스 주관으로 수입국 공조회의가 5월 20일(월) 점심시간에 있었고 한국 대표단으로 조재성 박사와 농정원의 전우석 대리가 참석함. 스위스, EU, 노르웨이, 일본 등 5개국이 참석하였고 의제 전반에 대해 논의하였음. 특정 의제나 주제에 논의가 집중되기 보다는 각 보고서의 연구방법론이나 각국의 관심을 일반적으로 공유하는 시간을 가짐
- 2014년 11월 농정시장작업반에서 한국이 수입 공조국 모임을 주관하기로 하였음

I. 회의명 : 제71차 농업무역공동작업반회의(JWPAT)

II. 개최일시 및 장소 : 2014.05.22, OECD 본부 회의장

III. 주관기관 : OECD 농업위원회

IV. 참석자 : 농촌경제연구원 조재성 부연구위원,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 전우석

V. 핵심요지

- 환경과 관련된 민간표준과 공공규제의 시너지를 살펴보기 위해 프랑스, 한국, 네덜란드, 스위스 4개국으로부터 총 7개의 사례조사에 대한 내용이 제시되었으며 사례조사 및 향후 진행될 유기농표준 관련 OECD 설문조사를 통해 민간과 공공사이에서 시너지를 이끌어낼 수 있는 부분과 함의를 이끌어낼 예정임
- 지역무역협정과 NTM(Non-Tariff Measures)은 무역 원활화 증진과 관련한 주요 이슈로 사무국은 2014년 11월 21일 개최 예정인 “식품과 농산물 관련 규제협력의 무역 원활화 효과” 워크숍의 목적과 내용에 대해 설명함
- 발리이후의 농업무역 협상에 있어 식량안보 목적의 공공비축, TRQ 관리방안, 수출경쟁 선언이 농업관련 주요 주제이며 OECD는 장단기적으로 모니터링과 투명성을 위한 방안 마련, WTO 등 다른 국제기구와의 협업을 통해 농업무역협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VI. 관찰 및 평가/건의

- 민간 표준과 정부정책간의 시너지효과를 살펴보는 이번 OECD 보고서는 국별 사례조사를 통해 유기농업/식품에 대한 민간 기준과 정부규제간의 관계 및 역할분담을 분석하는 내용을 제시하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어떻게 시너지가 발휘되는지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시너지효과를 측정하는 명확한 근거와 기준이 있어야 향후 명확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고 판단됨
- 지역무역협정과 NTM은 무역 의존도가 높고 동시다발적 FTA를 추진하고 있는 우리나라에도 중요한 이슈임. 따라서 관련 내용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대응이 필요하며 워크숍에 국내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여 우리나라 기업의 무역환경개선을 위한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
- 비록 발리회의의 결과물은 작을 수 있으나 향후 협상의 진전을 위한 디딤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며 발리회의 이후 농업무역 협상 추이를 면밀히 검토해야 함. 개발은 DDA의 핵심 이슈이고 식량안보는 많은 순수입식량개도국들에게 최우선순위

임. 개도국에는 너무 많은 소농들이 존재하고 정부들은 충분한 예산이 없으므로 비용이 많이 드는 직불금 제공은 어려운 정책 옵션이며 시장가격지지가 효율적인 수단인 것은 부인할 수 없음. 그러나 과도한 가격지지가 과잉생산으로 인해 무역 왜곡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신중한 모니터링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함. OECD 국가들은 글로벌 식량안보에 있어서 지나치게 무역의 역할을 강조하고 공공비축제에 대한 관심이 적다고 생각함. 따라서 공공비축제가 특히 자원빈약 국가들에 있어서 무역에 영향을 적게 미치면서도 식량안보를 획득하는 효과적 또는 효율적 정책도구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 OECD 측면에서 추가적 분석이 필요함

VII. 상세내용

1. 민간표준과 공공규제의 시너지

- 표준과 관련된 프로젝트로서 프랑스, 한국, 네덜란드, 스위스 4개국으로부터 총 9개의 사례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아직 네덜란드 관련 2개의 사례조사가 완료되지 않음
 - 한국 : Codex와 비영리기구인 IFOAM에서 만든 기존에 존재하던 국제적인 민간표준을 활용하여 유기농업에 대한 국가표준을 만듦
 - 스위스 : SWISS GAP은 민간 표준으로 B2B(business to business) 성격이며 민간표준에 공공제도를 통합시킨 사례이며 Bio Suisse도 민간표준으로 공공규제를 따르고 있음
 - 네덜란드 : EKO와 Quality Mark 모두 민간표준으로 공공규제를 따르고 있으며 단일 규제기구가 특징임
 - 프랑스 : 유기농업, 농가환경인증, 바이오연료에 대한 2Bsvs가 있으며 유기농업은 농업환경정책을 따르고 있으며 2Bsvs는 유럽연합의 바이오연료 지속가능 정책에 따른 자발적 제도임
- 유기농 표준에 대한 OECD 설문조사가 OECD 회원국, 아르헨티나, EU를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유기농 농업규정, 동기, 커버, 규정 제정, 이행, 인증에 대한 질문으로 구성됨
- 사무국은 다음과 같은 세가지 질문을 제시하며 회원국들의 의견을 요청함
 - 현 보고서에서 추가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민간표준과 공공정책 사이의 시너지 또는 충돌의 영역은 무엇인가?
 - 이번 사례조사를 통해 이끌어낼 수 있는 일반적인 결론은 무엇인가?
 - 유기농 표준에 관한 OECD 설문조사에 대하여 이번 조사가 어떻게 테스트될 수 있는가?
- 각국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함
 - EU : 보고서내의 몇몇 용어표현에 있어서 수정을 요청하였고 각 규격에 대한 박스를 추가하여 해당 규격의 역사를 정리하는 것을 제안하였음. 또한 보고서의 내용을 고려

할 때 제목에 “환경적(environmental)”이라는 표현이 추가되어야 함

- 스위스 : 매우 포괄적인 연구로서 스위스의 두가지 제도가 잘 설명되어 있음
- 프랑스 : 결과 및 절차 모두에 만족하며 설문조사 결과를 고대하겠음. 최종적으로 중요한 것은 매커니즘의 비교이며 시너지가 국가별로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가 마지막 보고서에서 중요할 것임
- 캐나다 : 스위스의 현행 유기농에 대한 규정을 잘 설명한 “Box 6. Swiss regulations on organic farming”과 같은 정보제공이 다른 나라의 사례에서도 제시되면 좋겠음. 네덜란드의 경우 정부의 감독과 다른 기관의 감독 사이의 구별이 잘 드러나지 않음. 시너지는 정책목표를 위해서도 중요하며 민간이든 공공이든 상관없이 참여자들 사이의 시너지도 중요할 것으로 보임
- 뉴질랜드 : 규격과 관련된 사람들이 이 보고서에 관심이 많으며 매우 가치있는 정보라고 평가하였음. 문단 51에서 지속가능성 목표를 얻기 위해 전적으로 소비자의 지불의사에 의지하는 것은 환경재의 최적수준을 일반적으로 얻지 못하게 한다고 하였으나 이는 정부개입에 대한 합리화가 될 수 있어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함
- 미국 : 사례조사가 잘 이뤄졌으며 요약도 잘 되었음. 그러나 민간표준과 공공규제 사이의 시너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며 소비자의 역할 부분도 내용이 부족함
- 아르헨티나 : 민간표준이 결국에 WTO SPS에서도 논의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함

○ 사무국은 다음과 같이 답변함

- 각국이 제시한 의견을 환영하며 이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음. 각국 사례조사는 부속서(Annex) 부분에 들어가게 될 것이며 마지막 보고서에서는 분석에 초점을 맞추게 될 것임

2. 식품과 농산물 규제협력의 무역 원활화 효과 - 토론

- 사무국은 2014년 11월 21일 개최 예정인 “식품과 농산물 관련 규제협력의 무역 원활화 효과” 워크숍의 목적과 내용에 대해 설명함. 워크숍의 목적은 규제 협력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NTM과 지역무역협정의 투명성에 대해 논의하고자 함. 참가대상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식품 무역 관련 종사자와 연구자임. 워크숍은 세 섹션과 종합토론 시간으로 구성됨. 섹션 1에서는 무역 원활화 관련 주요 정책 이슈에 대해 살펴봄. 섹션 2에서는 지역무역협정 규제 완화의 무역 원활화 효과를 살펴봄. 섹션 2에서는 기업인 등을 초빙하여 주제에 대해서 논의하고 기업 입장에서 규제 완화의 긍정적 효과와 문제점 등을 살펴볼 것임. 섹션 3에서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지역무역협정의 과정과 투명성에 대해 논의할 예정임. 종합토론 시간에는 무역 원활화를 위해 OECD가 할 수 있는 역할과 지역무역협정 이외에 무역 원활화를 가속화할 수 있는 정책방안에 관해 토론할 예정임.

- 회원국은 워크숍 개최를 환영함.
 - 프랑스: 기업 입장에서 무역 용이성을 살펴보는 것을 환영하며, 프랑스 기업인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용의가 있음.
 - 스위스: 모든 NTM가 지역무역협정에서 다뤄지는 것은 어렵지만 NTM과 지역무역협정은 중요한 주제이며 스위스는 이 주제들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음.
 - 캐나다: 반나절 동안에 너무 많은 내용을 다루는 것은 무리가 있음. 무역 용이성을 살펴볼 때 선진국과 선진국, 선진국과 개도국, 개도국과 개도국 간의 무역을 분리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음. 캐나다 무역 전문가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용의가 있음.
 - EU: 무역 용이성과 관련한 내용이 너무 이론적이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되길 요청함. 개도국의 입장에서 무역 원활화를 다룬 참고문헌이 추가로 포함되길 요청함. 현재 진행 중인 협상에서의 NTM을 다루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과거 협상에서의 NTM을 중점적으로 다루어주길 요청함.
 - 호주: 무역 원활화 증진의 필요성에 동의함. 무역에서의 비용을 줄이고 무역으로 창출되는 가치를 증진시켜야 함. 호주는 WTO에서 무역 원활화를 위한 조치들을 취할 것이며 모든 회원국도 WTO 조치를 따라야 한다고 생각함.
 - 아르헨티나: 식품 수출국으로써 NTM의 중요성에 동의함. 이번 워크숍에서 무역 원활화와 관련한 민간규범도 함께 다루어주길 요청함. 캐나다가 제안한 것처럼 국가 성격별(개도국, 선진국)로 무역 용이성을 구분하여 다루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함. 마지막으로 이번 워크숍에서 다루는 품목에 수산물 기반 식품도 포함되는지 궁금하며, 가능하다면 수산물 기반 식품도 이번 워크숍에서 다루어주길 요청함.
 - 포르투갈: 대기업은 대부분 무역 용이성을 확보하는 데 능숙함. 따라서 소규모 또는 중간규모 기업에서 무역 용이성을 증진시키는 방안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 사무국: 사무국은 무역 비용을 줄이고 무역 용이성을 증진시키는 잠재적 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음. 하지만 모든 관련사항의 경제적 측면을 학문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 따라서 이번 워크숍을 통해 기업 입장에서 무역 용이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함. 워크숍은 최대한 넓은 범위에서 무역 원활화를 증진시키는 방안에 대해 살펴보겠지만, 범위가 넓어질수록 회원국들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어려울 것임. 이런 부분을 조율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면 좋겠음. 일부 회원국은 추가적인 참고문헌을 요구하고 있지만, 너무 많은 참고문헌을 포함하면 워크숍이 문헌 발표에 치중될 우려가 있으므로 지양하고자 함. 이번 회의 내용이나 워크숍에 관한 의견이 있는 회원국은 2014년 6월 15일까지 사무국에 의견을 제출해주길 요청함.

3. 글로벌 가치사슬 - 정보제공

- 사무국은 다국적 기업을 중심으로 상품의 설계, 제조, 중간재 조달, 완제품 수출 및 유통 등의 기능이 별도로 진행되는 공급망 관리(SCM: Supply Chain Management) 전략이 활성화되고 있음을 설명함. 부가가치사슬의 이해를 위해 수출입 자료가 아닌 부가가치 중심의 D/B 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OECD와 WTO는 부가가치 중심의 D/B(TiVa : Trade in Value-Added)를 구축하고 있음.
- 사무국은 TiVa에 포함될 소득 그룹별 국가목록을 공개하였으며 32개 고소득 국가, 17개 중상위권 소득 국가, 13개 중하위권 소득 국가, 7개 저소득 국가를 TiVa에 포함시킴. TiVa에 포함될 대상 농업분야는 GTAP에 포함된 12개 농업부문과 8개의 식품산업 부문으로 총 20개 부문임. 사무국은 이와 더불어 농산물 교역에 대한 지표를 개발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본 연구와 유사한 연구의 예를 제공함.
- 회원국은 본 연구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
 - 아르헨티나: 사무국에서 오늘 회의에 대한 문서를 제공해 주길 요청함. 일반적으로 부가가치 창출에 있어 자본의 기여도가 높고 노동의 기여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국가별로는 차이를 보일 수 있으며 특정 국가는 노동이 부가가치 창출의 주요소인 경우도 있음. 따라서 연구에서 노동, 자본, 토지에 대한 부가가치를 구분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구분을 통해 각 요소가 부가가치 증진에 기여하는 정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함.
 - 일본: 일본은 본 연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용의가 있음. 2014년 6월 도쿄에서 동아시아 지역의 식품 가치사슬 창출이라는 제목의 국제 워크숍이 개최될 예정임. OECD에서도 참석한다면 정보 획득의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함. 다음 OECD 회의 때 도쿄 워크숍 관련 자료를 제공할 것임.
 - 프랑스: 객관적인 측정을 위한 자료도 부족하고 상당히 복잡한 연구라고 생각함. 하지만 흥미로운 주제로 프랑스는 본 연구에 관심이 있음. 사무국이 회원국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오늘 발표한 내용에 대한 요약본 등을 제공해주길 요청함.
 - 미국: USDA-ERS도 유사한 연구를 하지만 자료 획득이 어려움. 본 연구에서 언급한 식품과 농업의 정확한 의미와 범위를 정리할 필요가 있음.
 - EU: D/B의 가용시기와 활용도에 대해 설명해 주길 요청함.
- 사무국: GTAP에서 부가가치 부분은 8가지 부류로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아르헨티나가 우려하는 부분은 걱정할 필요가 없음. 요약보고서는 2014년 11월에 제공될 예정이며 이번 6월 무역 합동작업반 회의용 초안은 가지고 있음. D/B는 다음 회의에서 제공될 예정이며 D/B의 활용도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정책영향 등을 살펴보는 데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4. 발리 이후의 농업무역 협상

- 사무국은 발리회의 이후 농업무역 협상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으며 식량안보, TRQ 관리방안, 수출경쟁 주제에 대하여 각각 미국, 호주, 프랑스가 맡아 주요내용 및 시사점을 소개한 후 각국이 자유롭게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음
 - 이번 논의는 단기적으로는 글로벌 포럼을 준비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음

- 미국, 호주, 프랑스의 모두발언
 - 미국 : 식량안보는 2007/2008년 식량가격 인상 이래로 WTO 등에서 널리 토론되었으며 국가가 국민들의 식량안보를 다루는 것은 중요한 일이며 특히 개도국에게는 더욱 중요한 의미가 있음. 그러나 WTO의 기본목적인 자유롭고 예측가능하며 원활한 무역활동에 충실할 때 식량안보도 얻어질 수 있으며 기존 WTO 협정의 공공비축제도는 빈곤층에게 비축분을 통한 식량을 제공. 개도국들은 공공비축을 거의 유일한 도구로 의존하고 있으나 항상 최선의 선택은 아니며 관세를 낮추고 비관세 조치를 없애는 것이 식량에 대한 접근성을 보다 높일 수 있음. 시장개방은 국내시장의 경쟁력을 높여 소득을 증대시킴. 자급률만 높이는 제도는 특히 단일품목 생산지역에서 불확실성을 증대시킬 수 있음. 발리회의의 식량안보 목적의 공공비축제에 관한 발리회의 결정은 일시적인 것이며 다른 WTO 의무와의 충돌가능성이 존재함
 - 호주 : 농업은 다자 아젠다와 다자개혁의 중심이며 WTO 농업협정문은 시장개방을 지향해옴. 시장접근 부분은 TRQ로 다뤄지는데 발리회의에서는 2008년 DDA 농업협상 모델리티 초안(Rev.4)에 반영된 내용을 발체해서 제안됨. TRQ는 쿼터내 관세와 쿼터밖 관세로 나뉘 적용되며 3년 연속 소진율 65% 미만시 현행 TRQ 관리방식을 선착순 또는 비조건적 방식으로 변경해야 함. 호주는 결정된 것 이상으로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 프랑스 : 발리회의에서는 수출경쟁에 대한 각료들의 정치적 선언이 채택되었으며 수출보조 및 수출보조와 동일한 효과를 가진 조치들을 제거하기 위한 2008년 농업협상 모델리티 4차초안(Rev. 4)의 내용을 강조하고 있음. 이는 모든 종류의 수출경쟁조치를 점차적으로 제거하는 것임. 수출경쟁에 있어서 합의가 없었고 결정을 위한 준비가 없었기에 이번 선언은 법적인 구속력은 없음. 수출경쟁 관련 투명성 제고를 위해 사무국은 수출보조, 수출신용, 수출 국영무역, 식량원조 등과 관련하여 설문조사를 보내 자발적으로 답변하도록 하였으나 50개국만 설문조사에 답변한 상황임. 계속적인 협상을 위해서는 투명성의 기반위에서 이뤄져야 하지만, 아직 미흡한 상황임. 우리의 목적은 모든 수출보조와 그에 준하는 조치들을 없애는 것임. OECD는 WTO 협상 절차에 있어서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참조적인 기능을 함. 수출경쟁 관련하여 OECD가 질적, 양적 분석을 모두

수행할 수 있을 것임

○ 각국은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함

- 독일 : 비록 농업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무역원활화에 대한 부분이 오늘 논의에서 빠져있음. 식량안보 목적의 공공비축 합의는 기존 공공비축제도에 대한 웨이버이며 나쁜 영향을 가져올 수 있고 다른 개도국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음. 수출경쟁도 이와 마찬가지로. 주제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만큼 어떻게 서로 연결되고 의존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함
- 벨기에 : 프랑스의 발언처럼 데이터의 투명성이 부족하며 식량공공비축에 있어서도 투명성의 부족이 있음. OECD는 모니터링에 초점을 맞춰야 하며 발리회의 결정의 세부사항이 팔로우업되어야 함.
- 영국 : 공공비축을 위해 시장가격 이상으로 구매하는 것이 현재 허용되며 분쟁 소송으로부터 면제되는 상황임. 문제는 프랑스가 언급한 것처럼 투명성이 중요한데 일부 국가의 경우 보조에 따른 통보가 심각하게 지연되고 있음. OECD는 오랫동안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해 왔으며 영향을 평가해옴. 가장 중요한 이슈는 공공비축과 관련하여 어떤방식으로 계산하고 어떻게 통보하느냐의 문제이며 OECD는 보조 계산 방식 및 통보방식의 개혁에 기여해야 함
- 스위스 : OECD가 기여할 수 있는 측면으로 수출경쟁중 수출보조 부분이 모니터링하기 제일 쉬울 것으로 보임. 다른 이슈의 경우 투명성이 떨어져 쉽지 않음. TRQ 또한 우선순위로써 OECD가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많으며 공공비축제 관련하여 다른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기여할 수 있으리라 생각함
- 캐나다 : 다른 국가들이 언급한 바와 같이 OECD는 모니터링에 있어서 매우 유용함
- 노르웨이 : 발리 회의 관련 농업위원회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며 영향 및 효과에 대해서는 적어도 1년 전에 그 효과를 살펴봐야 함
- 폴란드 : 공공비축에 있어서 모니터링이 매우 중요함. TRQ는 기술적인 부분이고 데이터가 필요하며 TRQ 모니터링 정보를 각국이 내놓지 않으면 TRQ 관리방안이 실제로 무역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알 수 없음. 수출경쟁에서는 투명성이 중요하며 수출보조가 다루기 쉬운 부분임. OECD는 투명성을 위한 방법론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 봄
- 스웨덴 : NAMA나 서비스와 같은 WTO 의 다른 부분이 농업분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음. 특히 서비스는 농식품의 글로벌 가치사슬의 측면에서 중요함
- EU : 수출경쟁 주제와 관련하여 WTO 사무국이 최근 보고서를 출간하였고 OECD가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연구를 수행할 수 있을 것임
- 뉴질랜드 : OECD는 모니터링 기능으로 발리 이후 무역협상에 있어 기여할 수 있음. 그러나 중요한 것은 특정 주제에 치우치지 않고 모든 주제에 대해 공평한

접근을 해야함

- 아르헨티나 : WTO의 수출개도국 그룹(G20)이 수출경쟁 관련 제거가 아닌 감축(reduction)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음. 무역이 식량안보에 기여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우리가 현재로서는 이를 온전히 증명할 수는 없음.
- 칠레 : EU가 언급한 것처럼 수출경쟁 관련 WTO 보고서가 나왔고 어떤 점이 강조되어 있는지 살펴본 후 중복을 피하고 추가적인 연구를 진행해야 함. 발리회의 이전에 WTO가 TRQ 소진율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바 있으며 이 또한 참고할 수 있는 자료임
- 스페인 : OECD는 WTO 협상을 돕는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정보를 제공하고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음
- 벨기에 : NAMA, 서비스, 농업분야간 균형이 필요하듯이 농업내 이슈들 간에도 균형이 필요함. 2008년 Rev. 4 이후 6년의 시간이 흘렀고 환경이 바뀌었으므로 이에 대한 재평가도 필요함

○ 사무국은 다음과 같이 답변함

- 사무국은 각국의 유용한 의견에 감사를 표시하였음. 무역 위원회 회의 때 전문가들이 농업 없이 도하 라운드 결론이 없다고 하였고 OECD는 이처럼 중요한 농업분야에서 역할을 수행해야 함
- 장기적, 단기적 과제를 구분하는 것이 유용할 것으로 보임. 단기적이라고 하면 2014년 12월까지이며 Original Work가 끝나야 함. 개념적인 작업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지식도 업데이트해야할 것임.
- 단기적 과제는 다음의 세가지임. ① 수출보조 상당치(equivalent)의 추정 ② 모니터링과 투명성에 대한 역할 ③ WTO 사무국 등 다른 국제기구와의 협업
- 장기적 과제로는 PWB 2015-16의 과제의 수행, 벨기에가 제안한 바와 같이 무역의 지형이 2008년과는 많이 바뀌었으므로 이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는 것도 필요함.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농업과 서비스의 역할을 살펴보는 것도 필요함

5. 기타 : 발리 이후 농업 및 무역 정책 옵션 : 중국을 중심으로

- 사무국은 발리회의 이후 농업무역 협상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으며 중국에 초점을 맞춰 진행되는 워크숍을 중국 농업무역진흥센터(Chinese Agricultural Trade Promotion Center, ATPC)와 함께 베이징에서 진행할 예정임
- 향후 10년의 전망 뿐만 아니라 중국과 다른 주요 무역파트너들에 대해 다뤄질 예정임. 국내보조, 수출경쟁, 시장접근 부분에 대해 주로 다뤄질 것임
- 7월에 정식 초청이 있을 예정이며 아젠다는 보다 구체화될 예정임